

# 이상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 장관)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소추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탄핵안 법사위 회부 부결  
의사일정 변경해 선처리  
“임무수행 늦어 사고 키워”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238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0표 무효 5표로 의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야 3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 7시간 시한 안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기를 알렸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 또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를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중,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 탄핵 사유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유족, 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해 국민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기도 했다. 나아가 “다신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될 길 바란다”고 했다.

야 3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이 장관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부여받은 임무를 제때 수행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이후에도 제때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다. 이로 인해 현장 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가 지연됐고, 적절한 구조·구급 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참사 발생 이후 자택에서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용차를 85분 동안 기다리느라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참사 이후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하면서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에서 유가족 명단 확보, 중앙대책본부 설치 등에 관한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점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됐다.

야 3당은 탄핵소추안에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참사 대응 과정의 부실·불법을 밝힌 바 있고 그 결과 피소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여부를 표결했는데 이는 재석 288명에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또 야당 주도로 의사일정 변경 안건을 올려 재석 288명에 찬성 182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시키면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를 대정 부결문보다 먼저 했다. /뉴시스

## “선택적 적용 광상도 무죄 야당이 잘한 이상민 탄핵”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만약 지금 DJ였다면’ 강연회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동동 사건과 관련 1심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광상도 전 의원의 재판을 “공권력의 선택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8일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열린 ‘만약 지금 DJ였다면’ 초청 강연회에서 “과 전 의원은 명명백백하게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는데도 무죄를 받았다”며 “이런 공권력의 선택적 적용에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다”며 “좋은 신문과 방송을 보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이며 투표하며 부당한 권력에 저항해야 한다”고도 했다.

강연회에 참석한 원광대 학생들을 향해서 “대통령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며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 정신”이라면서 “대통령이 잘못되면 지적하는 것도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탕평인사 정제되고 검토된 언어 사용 영부인 부속실 신설을 통한 공적 임무 대응 신속한 사정 등을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역대 대통령들은 남북분단 동서갈등 해소를 위해 인사를 중시했다”면서 동서분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탕평인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대통령의 언어는 검토되고 정제된 말이어야 한다”며 외교 관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발언 등을 열거하기도 했다.

아울러 “(영부인) 부속실을 만들어 공적 임무를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부인이 대통령 역할을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또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하며 “사정은 신속해야 한다. (신속한 사정 후) 통합의 정치는 국민을 감동시킨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는 “민주당 등 야당이 잘한 일”이라며 “합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더라도 야당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 “새만금 사업 차질없이 진행토록 의회차원에서 노력”

도의회 환복위 현장의정활동  
새만금 남북도로 등 찾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8일 새만금 남북도로 현장과 고군산군도 장자교를 방문, 현황보고 및 현장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새만금 남북도로 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건설 현황을 보고 받고, 작년 말 개통된 1단계 구간을 둘러보며 새만금의 현재와 미래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군산공항과 관광단지를 잇는 길이 27.1km, 폭 6~8차로 구간으로 올해 7월에 2단계 구간 완료 및 개통을 목표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위원들은 이어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장자도의 해상인도교 스키야워크 조성지로 이동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지난 1월 10일 개통된 장자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8일 새만금 남북도로 현장과 고군산군도 장자교를 방문, 현황보고 및 현장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스키야워크를 직접 체험하며 시설 안전 상태 등을 확인했다.

이병철 위원장과 위원들은 “오는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계기로 전북의 새만금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로 건설 및 인프라 구축에 만

전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수시로 찾아 고충을 해결하는 등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연수원 등 업무보고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8일 제397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전북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추경예산에 전자철판 사업이 반영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모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철판 시연과 연수를 실시하여 에듀테크 기기가 모두 보급된 뒤에 조작 미숙으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은 에듀테크 교육을 위해서는 전기 수압공사, 기기 활용 능력, 스마트 기기 선택, 교사 배치 문제 등 사전에 준비할 사항이 많으며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준비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 행정소송 원인의 대부분은 서로의 대화 중 조그마한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스포츠 교육, 도덕성 교육 등을 연수 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번 업무보고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진형석 위원(전주2)은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련 활동이 부족하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최신 시설로 정비한 수련시설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수련 과정을 수정하여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슬지 위원(비례대표)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전북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와 공정한 심사 대책 요구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물으며, 도내 대회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경험과 성과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선행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도내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와 경험의 장을 마련해 주길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의회가 8일 공공요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올해 첫 회기를 맞아 의원 전원외 한복을 입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을”

전주시의회, 최주만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8일 공공요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주만 의원(동서하, 서서하, 평화·2동)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 의원은 “에너지 물가 지원은 선택과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절박한 생존의 문제”라며,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최근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 등 급격히 오른 연료비는 지난 2010년 통계 이래 13년 만에 최대폭이다.

이에 따른 최근 4년간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연료비 부담은 개인이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의 12.9%에 이르고 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전주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2023년 첫 회기를 맞아 한복 착용 활성화 차원에서 의원 전원외 한복을 입고 본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태 기자

## 도의회 문건위, 도민안전실 업무보고 청취

설립 취지에 맞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등 주문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8일 도민안전실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2022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올해 목표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전라북도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민안전실 소관 위원회 회의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2023년에는 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해 점검 주기 점검 방법 등도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도민안전보험의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최근 발생한 터키, 시리아 지진 상황을 언급하면서 도내에서도 최근 4년간(2019~22년) 크고 작은 지진이 197건이나 발생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현재 58%에 머물러 있는 내진화보율을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도내 시군에 설치된 민방위경보시설과 마을방송시

설 연계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 경보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양해석 의원(남원2)은 어린이·노인 등을 보호하고 범죄 발생 우려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 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의 사업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되었는지 철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별로 편차가 심한 지진대피시설 현황 문제점을 언급하며,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함께 지진대피시설을 보다 확대 지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0)은 농작물 수확이 끝나고 남은 농민잔재물을 소각하는 경우 환경오염, 미세먼지 발생, 산 불피해 위험 등이 왕왕발생한다면서 도민의 안전 및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 도의회 행사위-전북연구원, 공동세미나 킥오프 회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와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이 8일 공동세미나 kick-off 회의를 열었다.

공동세미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전북연구원원에게에 대한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및 발제를 맡으며, 분기별 1회씩 총 4회의 공동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이재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전북연구원의 협력이 도정발전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ck-off 회의에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 김경수 운영위원장, 송승용·염



영선·박정규·김성수·오현숙 의원, 노홍석 전북장 기획조정실장,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김보국·이성재·이중섭·김시백·김재규·이주연 박사가 참석했다. /김재훈 기자